

지방선거 필승 다짐하는 전략서 봇물

통합선거법 해설서 등 다수... 선거문화 저해하는 책 경계해야

풀뿌리민주주의는 지방자치제의 본격적인 실시를 앞에 두고 그 풀뿌리가 출판계까지 파고들고 있다.

현재 서점에 진열된 지방자치제에 관한 책은 모두 30여 종. 92년 말 대통령선거 때 선거관련서가 홍수를 이루었던 것처럼 지금의 출판현황도 그와 다를 바 없다.

서점에서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가 임박했음을 알려주는 책은 학술연구서를 제외하고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30여종의 지방자치관련서 중에서도 자치단체장 선거에서 '필승'을 다짐하고 있는 선거지침서들이 최근 독자들(?)로부터 더 많은 관심을 끌고 있는 실정이다.

「지방선거 공략론」(이기옥, 문원), 「선거운동전략 25시」(손봉숙, 집문당), 「공약과 선거전략」(송근원, 한국선거전략연구소), 「새 선거법 신 당선전략」(윤길상, 명진출판), 「선거 마케팅」(추부길, 모스트커뮤니케이션)이 바로 그런 책들이다.

‘결단’에서 ‘선거가 끝난 뒤까지’

이 책들은 통합선거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합리적인 선거운동전략을 나름대로 제시하면서 독자들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다는 특징을 보여준다.

「지방선거 공략론」은 지방자치에 대한 이해와 함께 출마에서 당선까지 후보자가 해야 할 일을 적고 있다. 지방자치의 의미와 기본원리 및 그 기능 등에 대한 간략한 설명과 함께 이상적인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회의원의 모델을 제시하며, 바람직한 지방정부와 지방회의의 구성과 함께 지자체 성공의 관건은 유능하고 성실한 인물을 선출하는데 달려 있다고 강조한다.

또한 선거일정은 어떻게 짜여져 있으며, 선거기간과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 그리고 누가 어떻게 언제까지 입후보할 수 있으며, 당선되기 위해서 후보자가 해야 할 일까지도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선거운동전략 25시」는 출마의 결단에서부터 선거전략 수립, 조직관리, 연설, 유권자와의 접촉, 선거가 끝난 뒤 낙선자는 당선자에게 축하를 당선자는 낙선자에게 위로의 전화쯤은 걸어주라는 내용까지 담고 있어 출마자와 운동원의 실용정보로서 읽힐 만하다. 이 책은 92년부터 한국여성정치연구소가 후보자와 선거

30여종의 지방자치제 관련서

중에서도 선거지침서들이 최근 주목을

끌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현상을

‘선거과열현상’이라고 보고 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이제까지와는 전혀

다른 선거양태에 대해 각 후보자나

운동원들이 진작부터 연구중이라는

분석을 내리고 있다. 하지만 바람직한

선거풍토를 저해하는 선거전략서도

있어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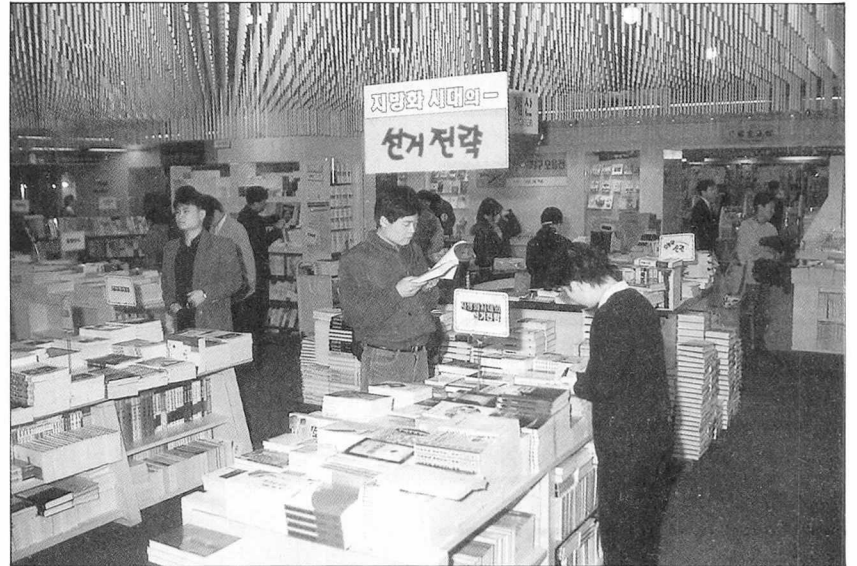
운동원에게 선거운동방법을 훈련시키기 위해 주관해온 ‘캠페인 스쿨’의 교재를 개정한 것이다. 선거운동의 제원칙을 이론적으로 밝힌 본문, 그리고 현실과 유사한 상황에 실제로 적용한 선거운동사례를 모은 시나리오가 한 쌍을 이루고 있다.

한편 상업 마케팅 방법을 활용해 선거도 마케팅 개념을 도입해 치러야 한다는 책도 있는데, 「선거 마케팅」이 바로 그것이다. 지난 13대 대통령선거 때 도입돼 14대 선거에서는 마케팅 선거방법에 있어서 많은 진전을 보인바 있는데, 이번 지자체 선거에서도 직관에 기대지 말고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마케팅 개념의 선거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역설한다. 특히 이 책은 현대의 선거가 이미지 선거임에 비추어 이미지 포지셔닝에 많은 설명을 하고 있다.

“돈은 묶고, 말과 발은 풀어야 한다”

위의 선거방법론에 관한 책들은 한결같이 새로 개정된 선거법의 개념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즉 지금의 통합선거법은 “돈은 묶고, 말과 발은 푸는” 선거혁명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과거와 많이 다르다는 것. 기부행위 등 각종 선거활동 규제가 엄격하게 적용될 통합선거법은 당연히 각 후보자들의 선거운동에 거추장스러운 짐이 되고 있다.

예를들어 선거일 18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의 기간동안에는 “입후보예정자가 자신의 저서·창작품 등을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무상 또는 통상보다 싼값으로 배부 또는 판매하는 행위”도 이익제공 행위로 간주되어 법의 제재를 받는다는 규정도 후보자들이 알고 있어야



서점에 진열된 각종 지자체 선거관련서. 통합선거법에 대해 충실하게 설명하고 있다.

할 일이다.

각 후보자나 운동원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선거법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 「통합선거법 해설」(강수림, 돌베개)은 그래서 지침서로 쓰일 만하다. 통합선거법은 단일법률로서 법조항이 가장 많은 방대한 법. 이를 체계적으로 이해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은 사람들에게 「통합선거법 해설」은 그 궁금증을 해소시켜 준다.

제1장 ‘총칙’에서부터 제17장 ‘보칙’까지 277개 조항과 ‘부칙’ 11개 조항을 법의 체계와 동일한 순서로 해설해 놓았으며, ‘우리나라 선거제도와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의 의의’를 설명하고 있다. 또한 선거법 전문과 해설을 신고 있는데, 이와 함께 과거 유사한 사례에 대한 판례와 유권해석도 참조해 놓았다.

지난해 말과 올해 집중적으로 출판된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관련서 이외에도 「당선을 위한 선거전략」(한국폴리테크연구소, 공동체), 「필승의 후보실천학」(노준래, 동인기획), 「선거전략 이렇게 싸워라」(미디어리서치선거기획본부), 「과학적 선거전략」(김기도, 고려원미디어), 「선거연설의 방법과 실제」(편기범, 집현전) 등 지난 91년 선거 때 출간됐던 선거관련 책자들도 또다시 선보이고 있다.

선거관련서와 함께 학술적인 면에서 각종 지역연구서 또는 지자체 설명서도 관심을 끌고 있다. 이 책들은 그동안의 지자체 시행착오와 해당 지역의 구체적인 문제를 지적하면서 그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책들은 상당한 질적 편차를 보이고 있는데, 서점에서 지자체 관련서를 고르고 있는 회원 김정수

씨(33)는 “이같은 질적 편차는 지자체에 대한 확실한 이해가 아직 정립되지 않았음을 단적으로 드러내는 증거가 아니겠느냐”고 반문한다.

‘선거 과열 조짐’ 비판도 제기

선거일자가 아직 5개월이나 남아 있음에도 선거관련서 판매가 때 아닌 호황을 누리고 있는 이유는 ‘선거과열 조짐’으로도 보이지만, 무엇보다 새로 제정된 통합선거법때문이라는 것이 서점가의 지배적인 의견이다. 또 이제까지의 선거와는 ‘전혀 다른’ 양태의 선거운동에 대해 일찍부터 후보자들이 연구를 하고 있는 현상으로도 해석된다.

하지만 “선거관련서들이 바람직한 선거문화와는 상반되는 견해까지 마구 써대고 있는 점은 비판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한 출판인은 말한다.

가령, “최대한 법을 지키되 어느 정도 가벼운 경고처분 정도는 감수할 각오로 운영의 묘를 살려나가는 것이 현명하다”거나, 선거법 위반 말썸이 선관위나 경찰의 조치에 의한 경우보다 상대방의 고소·고발이나 내부자 소행에 의해 발단된다면서 “상대편의 선거법 위반사태를 수집 대비”하라는 등의 말은 목적만 향해서 앞을 달리는 오늘날 우리나라의 정치판도를 대변하고 있는 모습으로 비쳐질 소지가 다분하다는 지적이다.

—이성수 기자